

“현정 질서 파괴 대가…민주주의가 세운 이정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 시민사회 반응

광주민주변호사모임 “응당한 처벌…사회 개혁 출발점”

광주시민단체협 “최소한의 정의 보여줘…사면 없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현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응당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구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1심 선고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43일 만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대체로 “사법부가 현정 파괴 행위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창운 광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위로부터 계엄을 선포하며 현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죄 판단은 사

실상 예견됐지만, 재판부가 어떤 형을 선택할지가 관심사였다”며 “법정형이 무기금과 이상인 만큼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지부장은 사형 구형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현정 질서 파괴라는 상징성이 비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다만 현재 사형 제도가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은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엄중한 판단”이라며 “피고인의 재판 대도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하면 형을 낮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1심에 불과해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선고가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



19일 오후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사합의25부(지구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권력 남용과 부패 구조를 돌아보고 바로잡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현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광주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켜내고, 법은 결국 권력 위에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무기징역 선고는 아쉽지만 다시는 이 땅에서 제2의 5·18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며 “내란은 단순한

정치 범죄가 아니라 또 다른 국가와 국민을 향한 폭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은 현정질서가 무너질 때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증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소한의 정의를 보여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면 없이 평생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고를 계기로 보

다 분명한 내란에 대한 수사와 새로운 기초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판단인 만큼 법리적 정침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신종론도 나왔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란죄 적용 범위와 ‘국현문단 목적’에 대한 법리 판단은 상급심에서 보다 정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영진-송태영 기자 looks@gwangnam.co.kr

‘공동주택 계약’ 정보공개 지연 과태료는 부당

법원, 취소 결정…“법령상 명시된 위반 아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계약 정보 공개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광주 서구가 A아파트에 부과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구는 A아파트가 2024년 4~5월 수의계약 4건(운동기구 교체·소독·소방시설 점검·승강기 유지관리)을 체결 판결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행정처분 기준과 법령 해석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했다. 지자체 과태료 처분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행정처분 기준과 법령 해석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했다. 지자체 과태료 처분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청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A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국토교통부 고

시인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공동주택관리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2호에

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로 보

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전자입찰 방식 미준수, 경쟁입찰 원칙 위반, 감사의 입찰 참관 미허용 등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낙찰자 결정 결과 공개 지연은 현행법

조항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규

정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행정처분 기준과 법령 해석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했다.

지자체 과태료 처분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역시 “지자체의 과태료

중심 민원 처리관행은 행정지도 우선 원칙을 협회화하고 공동주택 자치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며 “고의성

이 없고 임주민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

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보다 행정지도를

우선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수사·자산 동결 등 전방위 압박에 탈취범 자진 환원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던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되찾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압수했다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환원했다. 검찰은 이달 17일 오후 6시 6분께 분실한 코인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2021년 11월 불법 비트코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6·여)의 전자지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고, 지난해 8월 외부 전자지갑으로 이체됐다.

검찰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이 압수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을 시도하다가, 정상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산을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분실했던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

전자지갑을 거쳐 특정 전자지갑에 전량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소

에 해당 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자산을 회수하는 등 인출부터 막았다.

또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도록 하는

등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 동결 조치로 인출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송금하는 수사망에 피싱 사이트 조직이 암벽을 느껴 비트코인을 자진 환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탈취한 비트코인을 반납했더라도 범죄 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비트코인이 유출한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압수물 관리와 인수인계에 관여했던 수사관 5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오는 3월 초·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입학준비금은 신입생들이 교복, 체육

학교는 오는 3월 학기가 시작되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에게 입학준비금 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3월 말 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5·18기념재단 “왜곡·폄훼, 법률로 강경 대응”

5·18민주화운동

민·형사 등 26건 진행·왜곡 도서 등 20건 신규 확인

“근본적 해결책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 수록” 촉구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19일 오후 2시 재단 2층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 역사왜곡 법률대응 현황 및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 전두환·지만원 관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결과물이다”며 “전두환 회고록은 5·18 진상규명의 디딤돌이 될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두환은 2016년 6월에는 5·18의 북한군 개입설이 금시조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2017년 4월 출판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지만원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민주주의 역사를 확인하는 문제다”며 “5·18에 대한 왜곡·폄훼 근절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매번 법적 위자료 처분을 받아도 수익이 높기 때문에 왜곡이 극복되지 않는다”며 “범죄로 인한 수익이 환수되는 법적 제도가 절실히”고 언급했다.

또 “위기 사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 연구 성과와 결합해 왜곡·폄훼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이 법률 대응하고 있는 사건은 총 26건(형사 2건, 민사 4건, 고

소·고발 20건)으로 집계됐다. 재단은 연구자, 법률가 등과 함께 지난달 지난 4년 등 총 20건에 대해 5·18왜곡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최근까지 5·18에 대한 왜곡·폄훼 부정 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재단은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헌법전문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장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설 07:14
하림 18:19
일설 08:30
들점 21:19

